# 트럼프 골든돔에 북·중·러 반발…불붙은 글로벌 군비경쟁

신무기 개발·핵무력 증강 자극···상호확증파괴식 핵전쟁 억제 위태 "미사일 방어는 신기루···모든 국가가 수천발씩 만들도록 내몰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Golden Dome) 구축 계획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글로벌 군비경쟁이 가속할 조짐이 보인다.

냉전 종식 이후 수십년간 이어졌던 군비통제의 시대가 끝나고, 핵전쟁과 인류 공멸의 두려움이 상 존하던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미국 본토 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 기술을 지닌 북·중·러 3개국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골든돔은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소 냉전기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 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구 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레이저 무기 등이 실린 공격용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워 적대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승 혹은 종말 단계에서 격추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 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 이전에 골든돔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8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주가 무기 배치와 무력 충돌의 장 소가 될 수 있다며 골든돔 계획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도 27일 "우주 핵전쟁 각본"이라며 골 든돔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골든돔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더 많은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골든돔 계획이 강대국 간의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미국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몰아 넣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핵무기 전문가인 파벨 포드비그 유엔군축연구소 (UNIDIR) 수석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란 신기루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국가가 수백, 수천발의 미사일을 만들도록 몰아가면서 (서방과 중·러라는) 두 세계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자국을 겨 낭해 발사되는 미사일의 85%를 막아내는 게 한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미국 국토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골든돔'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북한 등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쏘아올리는 한두발의 미사일을 막아 내는 데만 1000기가 넘는 요격 위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미사일과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골든돔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WSJ은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에서 한발 뒤처져

있다"면서 "최선두에 있는 중국은 2021년 시속 1만 5천마일(음속의 약 19.7배)로 지구를 한바퀴 돈 뒤다시 중국 내의 목표물을 때리는 미사일을 시험한바 있다"고 짚었다.

푸틴 대통령도 2018년 미국 서해안을 향해 날아 가는 미사일 영상과 함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 는 무기라고 자찬한 바 있다.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은 27일 호주에서 열린 우주 콘퍼런스에서 "최근 중국 인공위성들이 우주공간에서의 근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을 보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구궤도에서 이런 고속의, 전투지향적 작전을 벌이는 건 중국 정부가 우주 공간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하는 도전을 적극 준비 중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골든돔 계획은 군비통제의 시대가 끝났고 상호확증파괴가 더는 핵전쟁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에 가깝다고 WSJ은 진단했다.

미 과학자연맹(FAS)의 핵정보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슨은 "아직 냉전 초기 수준으로 군비 증강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보이는 모든 요소와 역학관계가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수 있는 것들이란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유학생 사상 검증하나…美 국무부 SNS 심사 의무화 추진

#### 비자 인터뷰 일시 중지

미국이 유학생에 대해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 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셜미디어(SNS) 심 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 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유학·어학연수 비자), M(직업훈련 비자), J(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 비자가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SNS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 (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머스크의 화성우주선, 9차 지구궤도 시험비행 실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십 (Starship)의 9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 지만, 또 실패로 끝났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미중부 시간으로 27일 오후 6시 30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스타십이 지구 저궤도를 향해 발사됐다.

현장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스타십이 드디어 발사됐고, 약 3분 만에 스타십 발사체의 1 단부인 로켓 부스터 '슈퍼헤비'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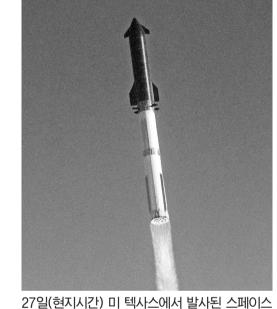
슈퍼헤비는 미국만(옛 멕시코만) 해상으로 낙 하하면서 엔진이 일부만 재점화돼 급격한 하강이 이뤄지면서 기체가 분해됐다.

다만 이 로켓은 지난 7차 시험비행에서 온전히 회수된 로켓을 재사용한 것으로, 이런 기체 손실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스페이스X 측은 설명했다.

스타십 시험비행에서 이미 한 번 쓴 로켓을 재사 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슈퍼헤비와 분리된 뒤 궤도로 진입한 우주선은 원래 약 67분간의 비행 후 인도양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었으나, 비행 도중 약 30분 만에 자세 제어 능력을 상실하고 기체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비행 과정 생중계를 진행한 스페이스X 엔지니 어는 "스타십 내 연료 탱크 시스템 일부에서 누출



X의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 /연합뉴스

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계획대로) 통제된 (대기 권) 재진입 가능성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후 우주선은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권에 진 입했고, 발사 시점 기준 약 50분 만에 교신이 끊겼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온도는 섭씨 1 천400도 정도로 치솟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상 태에서 열기로 인해 기체가 분해됐을 것으로 추정

##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체코 정부가 법정 다툼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 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 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 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 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방침이었다. /연합뉴스

